

국힘 “민생 집중” 민주 “여, 시간끌기”...예산 공방

여 “탄핵 위한 본회의 개최 으뜸장...다수 의석 힘자랑” 야 “예산안 심사 지연...국회 차원 수정안 마련 할수도”

여야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 앞에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위해 예산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둔 예산안도,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닌 오직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으뜸장을 놓고 있다”며 “다수 의석의 힘자랑을 한

번이라도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13곳 중 절반에 달하는 6곳의 상임위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청년 관련, 지난 정부의 원전 후속 사업 예산에도 ‘윤석열’ 꼬리표가 붙어있는 듯 보이면 무조건식 삭감의 갑박을 휘두르고, ‘이재명’ 꼬리표가 붙은 3만 원 청년패스,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증액을 이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내년 총선까

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이라는 정부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국회도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 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지연 이유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것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자동부의를 노린다면 국회 차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일 공청회부터 부별심사, 종합정책질의, 조정소위까지 약 4주간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야당이 찾아다니며 심사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은 회피하는 반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다음날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자동부의를 악용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회피하고 저해하는 정부의 의도에 맞서서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합법적 권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역설적으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정부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국민의 숙원사업,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충선 앞두고 모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충선필승 전진대회 및 충선기획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와 함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조장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26일 오

“광주시교육청 내년 예산...사업 중복·공무직퇴직금 법규 미준수”

교육비특별회계 추정안 2조8596억원 규모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2조 8596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전문위원회는 “교육공무직 퇴직금 예산 법규 미준수,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 중복, 코로나19 관련 사업 집행 잔액 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26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제3회 광주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총규모는 2조8596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1339억원 대비 2743억원(8.8%)이 감액됐다.

감액 예산 중 시설사업비가 214억 2000만원으로 시교육청 본청 11개 사업, 서부 교육지원청 5개 사업, 동부 교육지원청 7개 사업이지만 시교육청은 22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해 교육행정력 낭비와 의회 예산 심의기능 저하, 현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재정 악화 위기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5월부터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 공동구축 예산’으로 6억 149만원을 배정했다.

기초학습부진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은 총예산 598억7100만원 중 43억48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100억원 지원받는 전남도 체육회 감사는 사각지대”

100억원의 도비를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도의회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도의원(나주3)이 전남 진행된 관광체육국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체육회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예산심사 질의를 통해 “도체육회에 100억원이 넘는 도비가 지원되에도 체육회에 대한 의회 감독 기능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률 개정제 따라 체육회가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중 9개 시·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빠져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체육회에 대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 내 악습 끊어야” 폭행 피해 전공의 국민 청원 호소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온 광주지역 대학병원 전공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게시하며 외국 내 폭력의 대물림 단절과 가해 교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에서 재직중인 전공의 A씨는 전남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전공의 폭행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의과대학 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을 폭로, 자진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폭력이 근절된 수련환경에서 동료 전공의가 따뜻한 의술과 인술을 익히길 바란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병원 신경외과 B교수로부터 당했던 폭행 사실들을 적시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 사회에서 벌어진 개탄스러운 상황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 환경과 더불어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청원의 동의 수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856명이다.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병원 측의 조치 상황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며 청원 동의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 권준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前) 영국 공사를, 신임 2차장에 황원진 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사실상 국정원 내부인사 잡음에 대한 경질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前)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후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홍 1차장에 원장 직무대행을 맡길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계속된 인사잡음에 대한 질책으로

임한다. 국정원은 지난 6월부터 인사 문제를 둘러싼 내용을 겪었다. 국정원 부서장 인사에서 김 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원장에 조직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최근 주요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또 비슷한 내용의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김 전 원장이 권 전 1차장의 직무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목포·신안 통합, 경제 파급효과 1조 2천억”

행정편익 4585억·2027년 관광객 2200만명 예상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1조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 목포대 용해캠퍼스에서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목포대 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 458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000억원,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회는 통합사례분석, 주민의견 조사결과, 부분별 통합효과분석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등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에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

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 설득 노력 개발을 주문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최태욱 위원장은 “후손에게 경쟁력있는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민의 지혜를 모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안목포통합추진준비위원회 주장배 위원장은 “신안·목포 상생협력과제를 위해 시군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상생과제와 미래 비전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회와 시군의회 의원, 양 지자체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호 기자

민주 “여,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 전략”

“김기현·인요한 윤심 경쟁 모습에 한숨만...불쌍사나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윤심 경쟁만 하는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략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민심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어 ‘대통령과 자주 만나 3시간씩도 이야기한다.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도 한다’고 강조하며 윤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변했다”고 했다.

그는 “인요한 혁신위가 충선을 앞두고 김 대표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결단을 요구하니 오히려 윤심은 나에게 있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여당의 미래를 결정할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이 윤심 경쟁을 벌이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윤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며 “민심은 체져두고 오직 윤심이 나에게 있으니 내 말이 맞다면 우겨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불쌍사나워”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당은 국민에게 관심이 있기는 하느냐”라며 “국민은 지금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고통에 빠져 있는데,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불쌍사나운 윤심 경쟁을 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조태용 “불리한 9·19합의 업적 아니다”

“수도권 2천만 재산·생명 지키기 위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라며 “이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의 9·19 합의 효력 정치 결정에 야권에서 ‘전 정부 업적 지우기’라는 반발이 나온 데에 대한 답변이다.

조태용 국가안보 실장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치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영국·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조 실장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

조 실장은 우리 정부가 효력 정치한 내용은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2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를 갖고도 수도권 전체를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체결한 9·19 합의의 효력을 정치하는 건 ‘문재인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고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9·19 합의는 우리에게 불리한 합의다. 이를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진 “한일중, 조속한 복원·정상화 합의”

한국, 일본, 중국의 외교 수장이 26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정상화하기로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10차 한일중외교장관 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갖고 “3국 장관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저는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장관은 3국 협력체제

의 최정점인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